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체자유주의세미나 501회

〈발제〉

AI시대의 노동법(노사관계) 방향과 과제

2025. 11. 27(목) 07:30

이승길
한선재단 고용노동정책연구회 회장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前 아주대 법전원 교수(노동법)

1. 문제제기-배경

◆ (정치 대변혁기) 정권/세력/체제 교체 ⇒ 21대 대통령 선거('25.6.3)

- 자유민주주의 핵심적 규범 – 제도적 자체, 상호 관용
- 역대 정권별 상이한 정치 상황
  - ❖ 윤석열 정부(여소야대 – 야당 대표 정치적 파트너 부정, 탄핵/특검)
  - ❖ 정치의 사법화(사법지배), 사법의 정치화, 입법부 대법원장 청문회*
- '탄핵'정국 : (24.12.3) 비상계엄, (12.14) 국회 탄핵, (25.4.4) 헌재 탄핵심판
- '대통령' 조기선거(21대, '25.6.3) – 이재명 정부에 거는 기대

◆ 대선공약 갑론을박 : 국민의힘(김문수) vs 더불어민주당(이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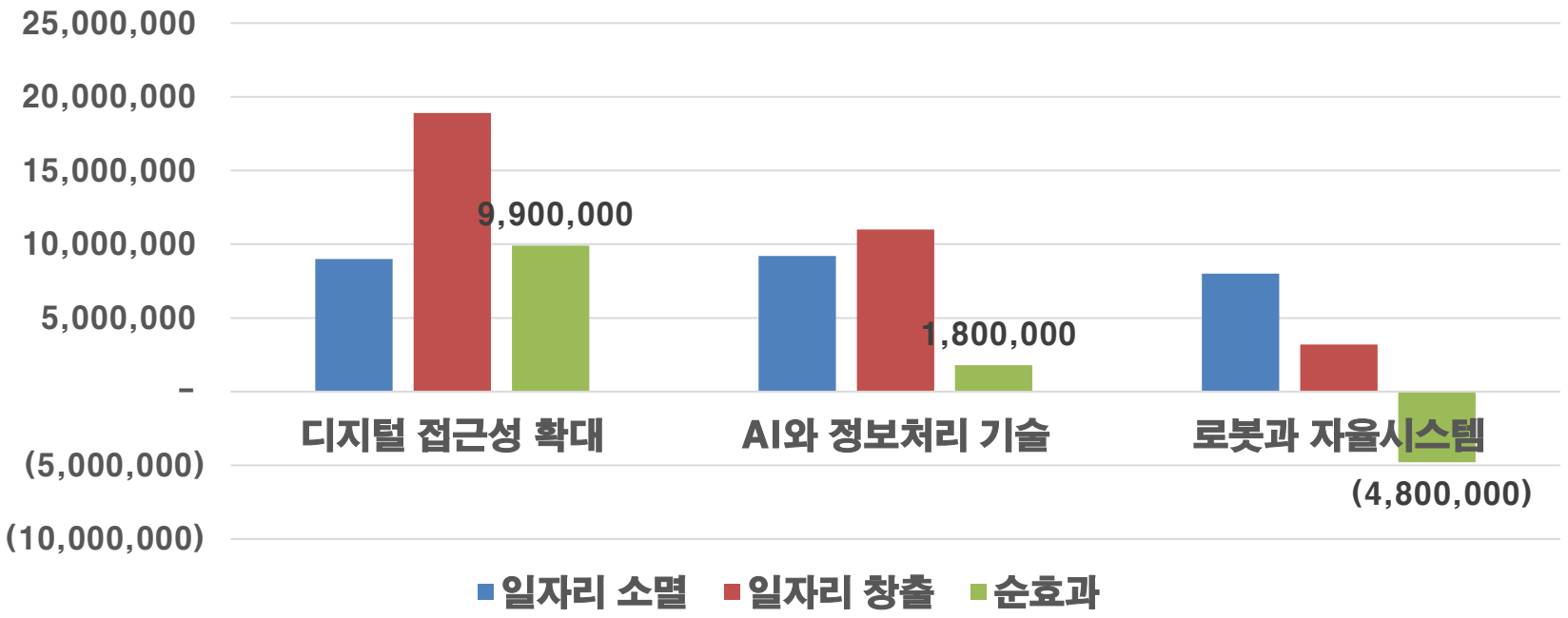
- 포퓰리즘 지양, 리스크 관리, 잠재성장률 제고, 민생 회복 (민생밀착형 공약)
- 국가재정 건전성 제고 대책인 산업 육성책 마련 – 적극적 산업정책
- 기후위기, 초고령화/초저출산 대응, 인공지능시대, 취약계층의 고된 삶의 개선
- 노동시장 개혁 : 열린 노동시장 구축-국가 역량체계 수립
  (학력 중심사회 ⇒ 역량과 성과 기반)

노동시장 전환

- WEF(2025)분석 : 거시 트렌드–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노동시장 전환' 직면
  - ① 디지털 기술, ② 인구구조변화, ③ 녹색전환, ④ 경제적 불확실성, ⑤ 지경학적 파편화 등

➢ 그 중 AI(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전환은 직무의 성격·업무 방식·필요 역량 변화하게 하는 최강 요인 – 고용 창출/소멸에 최대 영향

❖ AI기술 확산, 신성장 동력 발굴·육성 등을 통해 경제성장 추진



출처: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WEF, 2025)

노동시장 전환 대응

- 디지털 전환 –자동화와 알고리즘 기반 시스템 ☞ AI 인재양성
  - 데이터 분석, AI관리, 사이버보안, 로봇 유지보수 등 신기술 기반의 새 직무 수요 급증 – 구직자 및 재직자 AI 교육 지원
  - (가칭)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 AI·자동화, 기후위기/탄소중립/녹색 전환 ☞ 산업전환 –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공정한 전환지원 로드맵 마련
  -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협력사 고용안정 방안 마련
  - 내연차·철강 등 생산축소,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감산 등 구조적 전환 –전환 업종 지속 발굴·지원 확대, 전환일자리 창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경력 전환 지원 –사회적 대화 지원 – 사회적 계약
  - AI 산업전환 고용영향 평가 및 고용안정 지원
  - 적극적 노동전환 전략 –맞춤형 직업훈련, 재취업(전직) 지원, 소득지원 프로그램, 지역경제 다각화 프로젝트
- AI의 고용정책의 재정립
  - AI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잠재성장률 저하 보완
  - AI 시대에 필요한 인적자본의 축적도 중요 목표

2. 이재명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

(1) 정책 추진 여건

여건	내용
① AI 등 기술 변화	● 새로운 노동형태 급증, 기존 법으로 보호 한계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430만명, '24) 인적용역 사업소득자(862만명, '23) – 노동관계법 적용 한계 (근로기준법 미적용, 육아지원제도 일부적용, 사회안정망 일부 적용)
② 격차 심화	●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 대화 단절, 불공정 격차 심화 – 임금 격차는 크고, (대기업 정규 100, 대기업 비정규 62, 중소 정규 59, 중소비정규 42), – 산업재해/임금체불은 소규모 사업장 급증
③ 노동시장 활력 저하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저임금 장시간 노동, 일하는 방식 변화
	– (저출생) 합계 출산률 급감(0.75. '24)
	– (고령화) 65세 이상 인구 20% 초과 (0.21, '24)
	– (장시간노동) OECD 대비 151시간 (한국 1859, OECD평균 1708)
	– (일하는방식 변화) 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초과, 설비/생산공정 자동화 등 확신

❖ 이재명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

(2) 정책 추진 방향

방향	내용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 공정/상생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AI, 인구구조 변화 대응 –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기업-노동자 공존을 위한 사회적 대화 촉진

❖ 이재명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

(3) 핵심 추진과제

과제	내용
① 공정.상생의 산업생태계 구축	●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 (권리 밖 노동보호) –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기본권리+지원 사업 근거) – 사회보험, 육아 등 부문별 지원 방안 마련 – 맞춤형 지원 사업 신설/확대
	●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9.15 대책발표) – (기본방향) 영사사업장,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 정부-지자체 민간이 함께 예바 주체로 노력, 사고예방이 노사 모두 이익이 되는 구조로 – (선제적 예방 지원 강화 + 노동안전 인프라 확대 + 제재의 실효성 제고 – 2023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 OECD 평균 수준(0.29 0/000)으로 감축
	●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으로 격차 해소 – 개정 노조법 = 격차해소법+진짜 성장법+중대재해예방법 * 책임있는 사용자와 노동자간 직접 대화 촉진 참여와 협력의 수평적 패러다임으로 변화 * (현장 안착) 현장지원 TF 노사의견 수렴, 지침/매뉴얼 마련 등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직무/직위/근무, 임금분포 등

❖ 이재명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

(3) 핵심 추진과제

과제	내용
① 공정/상생의 산업생태계 구축	● 사전예방 중심 감독행정 강화 및 임금체불 근절 – (사전예방 감독행정) 예방감독강화, 지자체 협업, 감독행정 전문화/효율화 – (임금체불 근절) 하도급 등 구조적 임금체불 개선, 상스베불 제재 강화, 사회적 인식 전환
	● 노동시장 관점에서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 – (통합정책 구축) 외국인력 도입계획 체계화, 체류 자격과 관계 없이 근로조건, 산업안전 등 통합지원 – (권익보호) 부당한 대우시 사업장 변경 용이토록 개선, 인권침해 및 산재사업장에 외국인 고용제한 강화 – (숙력인력 양성 및 장기근속)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개편, 숙련양성체계 구축을 통한 전문인력 전환 촉진
	● 퇴직연금 강화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후보장 – (수혜범위 확대)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1년 미만 근속노동자 노후소득 보장 방안 마련 – (운영/투자 다양화 및 수익률 제고)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대상 단계적 확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벤처 투자 허용 검토

❖ 이재명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

(3) 핵심 추진과제

과제	내용
②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AI 대전환 등에 따른 직업훈련 강화 – AI+역량 업(UP) AI+도메인지식 프로젝트 (재직자) 기업 현장 맞춤형 지원(제조AX, 사무마등) (구직자) AI리터러시 –AI현장 인재 맞춤 지원 (인프라) 지털트윈 등 훈련기법 혁신, AI 공유시설 – 평생직업 능력개발 : 국민내임배움카드 한 장으로 평생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내용, 지원수 등)
	● 지역 고용위기 선제적 대응 –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요건〉 급격한 고용상황 악화 울지역 선제적 지정 〈지정〉 공용정책심의회 심의/결정 〈지원〉 고용유지 +전직 지원+생계안정 지원 * 고용현안 대응 TF 통해 주기적 점검 및 신속지원 체계 구축 (여수, 광주 광산구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 이재명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

(3) 핵심 추진과제

과제	내용
②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기업의 진짜 성장과 일자리 여건 조성 등 지원 강화 – (진짜 성장) * 향후 5년간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조성 * AI/딥테크 분야 유망 스타트업 집중 육성 * AI 팩토리 확산을 통해 제조공정 생산성 향상 *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통행축제, 상권 육성 등 내수 지원 – (일자리 여건) *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지 (예: 영세사업장 사고예방시설) * 인력부족 지원 (예 :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 인건비/사회보험료 등 지원(예 : 고용보험유지지원금, 두루누리)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신속하게 지원 (예산반영 등)

❖ 이재명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

(3) 핵심 추진과제

과제	내용
②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청년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 (쉬었음 청년) 발굴(미취업 청년 DB구축)–다가가기(온.오프라인 1:1 취업 연계,) – 회복(심리상담, 포용적 일경험) – 〈구직청년) 기회 (일할 기회 확대)–성장(AI등 훈련/일경험/취업패키지)–취업(취업/구직활동) – 〈일하는 청년) (기초) 체불/산재/괴롭힘 없는 일터, (발전) 청년이 존중 받고 성장하는 일터 – 〈인프라 정비) (청년고용법 정비) 쉬었음 청년 지원 등 (일경험 법제화) 운영 근거, 지원 사항 등

❖ 이재명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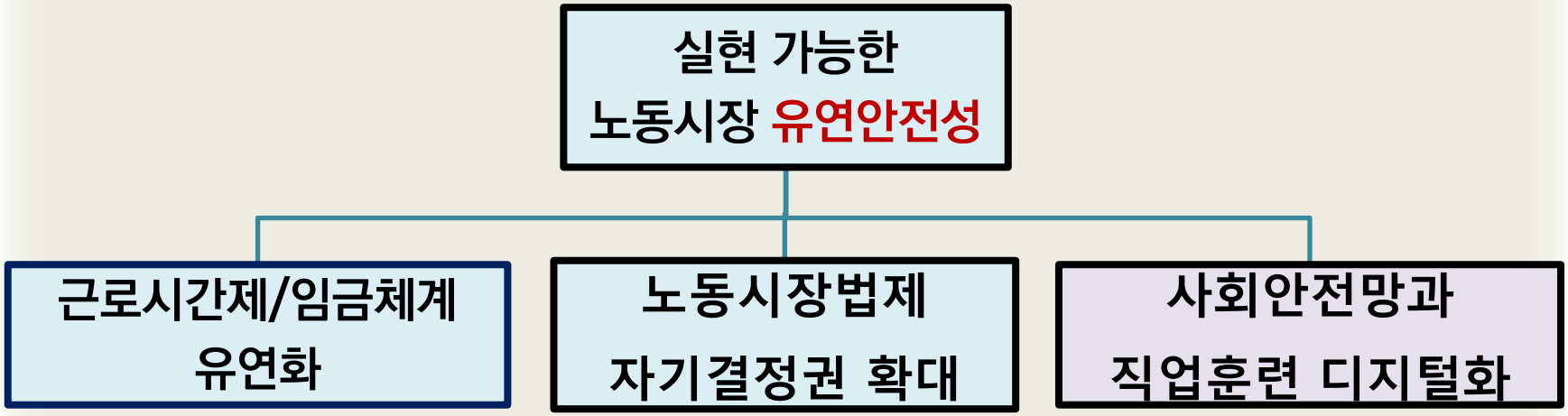
(3) 핵심 추진과제

과제	내용
③ 노동시장 활력 제고	● 주 4.5일제와 실노동시간 단축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 (주 4.5일제 확산 + 법제도 개편 + 취약분야 범정부 지원 * 2030년까지 OECD평균 수준 (1700시간)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 청년 고용과 상생하는 법정 정연연장 등 추진 – 〈사회적 논의〉 법정 정년 단계적 적용 〈범정부 지원〉 정착 지원+청년 상생+50’ 재취업 촉진 = 정년연장 조기 안착/ 확산

◆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 사회적 대화를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안전망, 기업의 부담, 고용안정성과 유연성 등을 한 번쯤 터놓고 논의해야 한다 ”

3. 시대전환과 노동시장 환경변화

❖ 혁신 주도형의 유연안전성* 전략



유연안전성	유연성과 안전성의 조화
유연성	인력 및 근로시간의 탄력적 조정, 생산성 제고 동기부여를 위한 임금체계
안전성	고용안전망 보장성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비정규직 보호 강화

4. 미래 노동법 개혁

(1) 기본방향

- 왜 '노동개혁'을 해야 하나 – 낡은 제도의 철창(iron cage)에 갇힌 노동시장
-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업 투자–기업 경쟁 생존–일자리 유지/창출–민생 회복
- 미래 지향 선진국형 노동법 구축을 전제로 합리적/공정한 '노동법 질서'로 재편
- 노동의 틀을 자체를 바꾸는 '노동시장 전면 대개혁'을 통해 미래 노동시장을 위한 선제적 노동시스템 구축
- 개혁의 핵심은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공감대 형성(비전)이 중요함

4. 미래 노동법 개혁

(2) 노동법 개혁 기본구조-신시대 정신

1) 실현가능한 고용시스템의 노동시장 유연안정화(*경제개혁)

① 민간 주도의 활동력 제고, 효율적 지원을 통한 고용지원

② 시대착오적 규제 과감히 혁파(노동시장개혁/규제개혁 등)

③ 격차 해소의 로드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임금체계 개선 등 구체적 강화된 노력 필요

2) 현안과제 및 정책 재편성 : 고용유지/창출

① 근로시간제·임금체계(최저임금)/비정규직 유연화 * 공공기관/대기업의 경우

- 연공서열 임금체계 페기, 성과와 기여 중심의 노시장 체계로 전환

② 노동시장법제의 유연안정성 : 청년일자리 (근로조건 유연 자율화)

- 합리적 해고 명확화 및 고용유연성의 합리적 보장
- 플랫폼/디지털 노동시장에 대한 선제적 제도 설계

③ 노사간 갈등구조를 자율적인 협력구조로 혁신 (정부 규제 억제)

④ 사회안전망과 재취업 강화, 직업훈련 디지탈시스템화

- 산재예방 및 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4. 미래 노동법 개혁

(2) 노동법 개혁 기본구조-신시대 정신

3) 점진적으로 착실하게 대응할 필요(⇒노동규율의 패러다임 변화)

① 노동시장 이중구조(불평등) - 임금격차 완화
- 노조조직율 확대, 초기업 단위 교섭,
- 단체협약 적용범위 확대를 통한 협약임금 적용의 확대
- 최저임금 인상,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 등

② 고용보호 조정-근로시간 유연화
- 임금체계 개편(패키지 개혁)의 다차원적 논의
-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점진적 개혁방식 제안

③ 국민의 고용가능성 제고
-생애주기별 역량육성 중의 평생직업훈련시스템 구축방안 등
* 연금제도와 정년연장(계속근로)의 연계

④ 초고령화·초저출산 대비
- 중장년 고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제도 개편

4. 미래 노동법 개혁

(2) 노동법 개혁 기본구조-신시대 정신

4) (미래 비전) 한국은 성장+통합+복지+(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

- **〈해법〉 포괄적 '사회적 대화' 구조와 전환관리**
  - ✓ 갈등 의제에 대한 갈등관리 조정+전환 관리 플랫폼 역할로서 (노사정) '사회적 합의' (경사노위와 국회 두축 전개, 업종별 사회적 대화 확대)
  - ✓ 이해관계자 참여 주체 대표성- 대국민 공론화(투명성/공정성/참여, 협력/소통의 장)

    * 이해관계자 : 중소기업, 노무제공자, 여성, 청년, 고령자 등
  - ✓ 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평가 체계 병행 – '통합 피드백 시스템 도입'을 통해 입법정책 시행 후 정량적 평가 등으로 분석해 정책 개선을 반영
- 향후 노사정 및 정치권이 각개 약진, 자기 이익 극대화하면 위기 극복은 실패, 노사정 신뢰와 정치적 리더쉽 회복이 우선임
- 한국은 많은 제도와 정책을 설계 실험해 왔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효과적인지 재평가하고, '이해관계 충돌'로 미래 지향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제도와 정책을 혁신

고맙습니다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한국괴롭힘학회 공동회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소셜아시아 시아 포럼 한국대표, ILO협회 부회장, 한선재단 고용노동정책연구회장
(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
성균관대 법과대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국노동법학회/비교노동법학회/사회법학회/고용복지학회 회장 역임
(저서) 성과주의인사와 임금법제, 노동법의 제문제, 일본 노동법입문(번역) 등 다수 단행본, 다수 논문

Lee Seung-Gil
Sglee79@ajou.ac.kr
010-4766-7324